"우리의 소원은 통일" DMZ 평화인간띠운동 전북본부 결성 기자회견이 27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4.27 DMZ 평화인간띠운동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한 · 러 소통채널 적극 확보

북방경제협력위, 첫 회의서 분야별 신북방정책 구체화

전략협 · 실무협 개최 논의… 정부 · 지자체 소통 강화

러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 신설… 진행상황 공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27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지방자체단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북방위 4차 회의는 지난해 12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던 3차 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북방위는 먼저 이번 회의에서 정부 · 지방자치단체 간 신북방정책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방경제협력의 고충으로 협력채널이 부족하고 상대국과의 정보 교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방위원장과 지자체 부단체장 간 회의 채널인 '신북방 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북방위와 중앙부처,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신북방 실무협의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방위는 이외에도 ▲중앙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방안 ▲제2차 한-러 협의회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기재부 · 산업부 ·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은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 · 러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조선 · 에너지 협력강화, 북방과의 인프라 및 ICT(정보통신기술) ·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올해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도 분야별로 확정했다.

특히,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북방 경제협력 및 수주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유라시아 펀드 1억 달러 조성',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러시아와의 쇄빙 LNG선박 건조협력과 서비스 · 투자 FTA협상을 개시하고, PNG · 전력망 공동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준공 및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북방위는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방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분야로 선정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를 말한다.

북방위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양국 간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이행상황 점검, 신규사업 발굴, 정보공유 등을 위해 북방위 주도 하에 분야별 실무그룹 반장들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분야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한 · 러 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도 공유했다. 양국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해 북방위와 극동북극권개발부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사업 신규발굴, 금융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검토하는 등 투자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북극항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외부전문가로 '북극항로 활성화 TF'를 구성 · 운영키로 했다.

북방위는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일제 징용' 전범기업 재산 속속 압류… 매각 절차 언제쯤?

전국 법원서 집행 절차 진행

신일철주금 대상 재산명시 신청

후지코시 등 소유 주식 압류

현금화 절차 곧 조치 나설 가능성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기초로 재산명시 신청과 자산 압류 등 집행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현금화를 통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 강제노역 유관 기업들에 대한 집행 절차 또는 이에 대한 신청이 서울, 대전, 울산, 포항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신일철주금에 대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 재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이 신청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명시기일에 신일철주금 측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가 이뤄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신일철주금 소유 피엔알 주식에 대해 1월 3일 8만1075주, 지난 14 · 18일 11만3719주에 대한 압류 결정이 이뤄졌다. 채권액 4053만7270원, 5억6862만449원에 해당한다. 피엔알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다.

후지코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울산지법에서 3건의 결정으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심 가집행 선고에 기초한 조치로 채권액 7억6500만원에 해당한다. 대성나찌유압공업은 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최근 대전지법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했다. 채권액 8억4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건 일부 압류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으나 대전지법으로 옮겨져 결정이 났다.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등 집행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조회, 다른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 등 추가적인 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압류 자산 매각 등 현금화 절차 실행에 이른 경우는 없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채무 이행 및 관련 협의에 대한 기대,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여파에 대한 고려 등이 배경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본 측에서는 강제노역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 압류 결정 등에 대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나오면 대항조치를 취할 방침",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심각하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조만간 피해자 측에서 현금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피해자와 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대응, 양국 정부의 논의 상황 등 주변 정황을 토대로 압류 자산 매각 등 후속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로 판결에 응하지 않고 대항조치를 하라는 일본 측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행안부 · 중기부 ·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소방 국가직화, 안전차원서 해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소방 국가직화'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산하 기관에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직화는 소방(관)의 염원이지만 (국민)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국가직화 방안이 인사 · 지휘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겨두고 재원도 신규 소방관에 한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절충안이라 인력 · 장비의 지역 편차 해소와 안전 사각지대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방 국가직화는 2014년 10월 31일 당시 여야의 합의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문화 산단 통해 청년일터 조성 가능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문화가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통해 청년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영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산단으로 한번 지정되면 일터밖에 만들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법도 손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스타트업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역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길 하나만 붙여도 거리에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지속적으로 펼 것"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와 관련해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가계통신비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5G 상용화에 따라 통신비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시행한 것이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5G 상용화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편요금제 정책을 같이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저가 요금제를 같이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조배숙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확보

조배숙 의원이 9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은 27일, 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사업 6억, 익산시 금마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9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조성된 익산왕궁보석가공단지에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와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익산의 보석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마면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익산 금마고도지구 일부지역의 하수관로 등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조배숙 의원은 "익산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은 익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주민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학의 사건' 추가자료 검토

검찰, 수사방식 곧 결정

조사단, 추가자료 송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특별수사단 공정성

우려 예단 안돼"

대검찰청이 김학의(63 ·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넘겨받아 조만간 수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과거사위 자료만으론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사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조사방식에는 특별검사와 특임검사, 특별수사단 설치 등이 있으며 이 중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착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채택될 확률이 낮다.

김 전 차관과 함께 법무부가 수사권고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검찰 출신인 점을 고려해 특임검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특임검사에게 현직 검사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권고한 수사 범위에 현직 검사가 포함되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 이때문에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같이 특별수사단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거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자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사위와 조사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내 조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행안부, 유아 · 장애아동용 지진 교재 제작 · 배포키로

행정안전부는 유아 · 장애아동용 지진 교육 교재를 제작 ·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만 있었다.

이 교재는 유아와 장애아동의 흥미 유발을 위해 코끼리 · 토끼 · 다람쥐 등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지진 발생 원리와 대피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구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한다. /뉴시스